

춘천~속초 철도 추진 여부 빠르면 다음 달 결정

윤호중 의원 ‘예산 미집행’ 질타 ... 박재완 장관 “조만간 예비타당성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

국회 기획재정부 국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조속한 추진 여부가 빠르면 다음 달 결정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산 미집행’에 대한 춘천 출신 민주당당원 윤호중 의원의 질타에 “조만간 예비타

당성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예타 결과도 없이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재조사를 한다”며 “지금 뭐 거의 (예타 결과)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강원도는 인구밀집도가 낮아 사업성이 좋게 나올 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평가해야 할 사업이며 동서 연결 고속화철도망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강조하는 한편 건설 분야 예산을 차츰 축소할 방침을 밝히는 등 SOC망 확충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박 장관은 “(도로·철도 등) 건설 분야 총예산 비중을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예산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의 질의에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라며 공색한 답변을 내놓기 바빴다.

이 때문에 도와 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타 결과가 기준치를 넘어 예산이 집행되면 차기 정부에서도 선도사업으로 추진돼 순풍을 탈 수 있다. 반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편익(B/C)이 1을 넘지 못하고, 정책

적 종합평가(AHP)에서도 0.5를 넘지 못하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사업의 B/C 분석 방식의 문제점과 B/C 0.39인 상태에서도 추진된 호남고속철도 등을 예로 제시하며 50억원 연내 집행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특히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가스관 연결사업,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중장기적인 비전이 예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강릉권과 속초권의 수요를 분산, 비용편익을 낮췄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도 정가 관계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예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 만큼 예의주시하겠다”며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반드시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자 wanki@

강원일보 창간 67주년 축하해 주신 분

- △최문순 지사 △김진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한기호 새누리당 도당위원장 △김기선 국회의원 △윤세영 SBS 명예회장 △김재형 춘천문화방송취사장 △김영철 G1강원민방 사장 △송광서 한국지방신문협회장 △조길형 강원지방경찰청장 △춘천시 △강릉시 △강원도청대변인실 △강원도체육회 △전수산 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연식 태백시장 △고석용 횡성군수 △박선규 영월군수 △정상철 양양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정호조 철원군수 △정갑철 화천군수 △황중국 고성군수 △김재호 한국신문협회장 △고동식 양재미디어대표이사 △김해석 전 방송인 △김화목 강릉시의장 △김홍수 강원도지청장 △이현희 회장 △노건일 한림대학 교총장 △류제승 육군 제8군단 군단장 △무신인체계 △박경재 한솔페이퍼유통㈜ 대표이사 △박광민 한국문화예술포럼 총연합회지회장 △박은주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정관 연립뉴스시장 △법검 우송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신흥사주지 △서종학 서림지업대표이사 △성석환 국제포타라3730지구 전 총재 △속초시 △송민주 평창경찰서장 △신동일·공번기 하의원 △신승호 강원대학교총장 △심규연 동해시정관한대행 △심상기 강원도의정회장 △심상만 강남병원감사 △안준석 강남병원이사장 △우원기 춘천소수 정선군의원(이상 무소)
- 방서장 △유상현 유터데미콘쥬 대표이사 △유운소 강일언론인 회장 △이강훈 대한전문건설협회강원도회장 △이광영 유터데미콘쥬회장 △이문섭 강원대학교총동무회장 △이명관 부산일보사장 △이명철 ㈜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 △이상철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이재술 인제경찰서장 △이정하 강원도민회부회장 △이철수 한국은행강원본부장 △인제군수 △임호순 강원도생활체육회장 △전상국 김유정기념사업회이사장 △전좌섭 신문동우회장 △전주수 춘천부시장 △정동기 강원도육상경기연맹회장 △최인호 하이테크진로취강원공장장 △최지순 강원도예총회장 △최흥집 하이원리조트대표이사 △퇴우정남월정사주지 △한인수 ㈜전주페이퍼사장 △함명섭 평창군의장 △홍기종 강원도사회복지사업회장 △김지현 엔투어여행사대표 △김종관 영월경찰서장 △문병완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남만진 동강시스타시장 △평창군의회 △삼척시 △김인배 삼척시의장 △조은수 삼척경찰서장 △박덕용 농협 삼척시지부장 △평창군 △원주시장 △1군사령부 △원주상공회의소 △고창용 동해경찰서장 △안승일 정선경찰서장 △김현숙 정선군의장 △김상복 농협 정선군지부장 △정철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방은범 정선군 기획감사실장 △장덕수 정선군의원(이상 무소)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결과따라 집행”

박재완 기재부장관

속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예산 불용 위기(본지 10월 24일자 1면 보도)에 처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집행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의 종합국감에 출석해 도연고 윤호중(민주통합당·구리)의원이 예산 50억원의 연내 집행 촉구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예비타당성 결과가 안나옴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게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된다. 재조사에 따른 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며, 이에 따랐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박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예산집행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해 사업의 연내 추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예산 50억원은 여야간 합의로 지난해 국회에서 편성한 것으로 조속히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해야한다”며 “강원도는 인구 밀집도가 낮아 경제성 분석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예산 집행을 압박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된 해당 용역비는 연말까지 사용되지 못하면 불용처리돼 국고로 환수된다. 서울/박지은

≡ 사 설 ≡

동서고속철도 50억 집행돼야 한다

-경제논리 앞서 북방시대 대비한 정책적 판단 내려야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염원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책정된 50억원의 기본 계획 용역비가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밀려 지금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두 달 안에 집행이 안 되면 국고로 환수될 수밖에 없어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50억원 집행을 거부하는 표면적 이유는 예비타당성 2차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차 조사 때보다 낮게 나왔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 중에는 경제논리에 앞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야 할 때가 종종 있다. 바로 동서고속철도가 그에 해당된다.

동서고속철도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중단철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철도다. 중국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와의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동북아경제권과의 연결고리인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북방항로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유럽으로 가는 최단 거리가 확보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동북 3성 등 극동지역이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결코 먼 일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닥칠 일이다. 그때를 대비해 동서고속철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기간산업이다. 동서고속철도를 경제적 논리에 가둬놓고 마냥 미룰 것이 못

되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정책적 판단을 내려 50억원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내년도 일반철도 사업 예산 1조3000억 중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 등 강원도에 8000억원이 배정됐으니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50억원 용역비를 틀어쥐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15년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원주~강릉 복선전철 대신 포기하라는 말인 듯한데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길 바란다. 동서고속철도 용역비 50억원을 연내에 집행한다 해도 착공까지는 최소 4년 이상 걸린다. 완공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작금의 동북아 주변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동서고속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도내 항만과 철도망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어차피 강원도가 동북아 창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동서고속철도 용역비 50억원을 연내에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